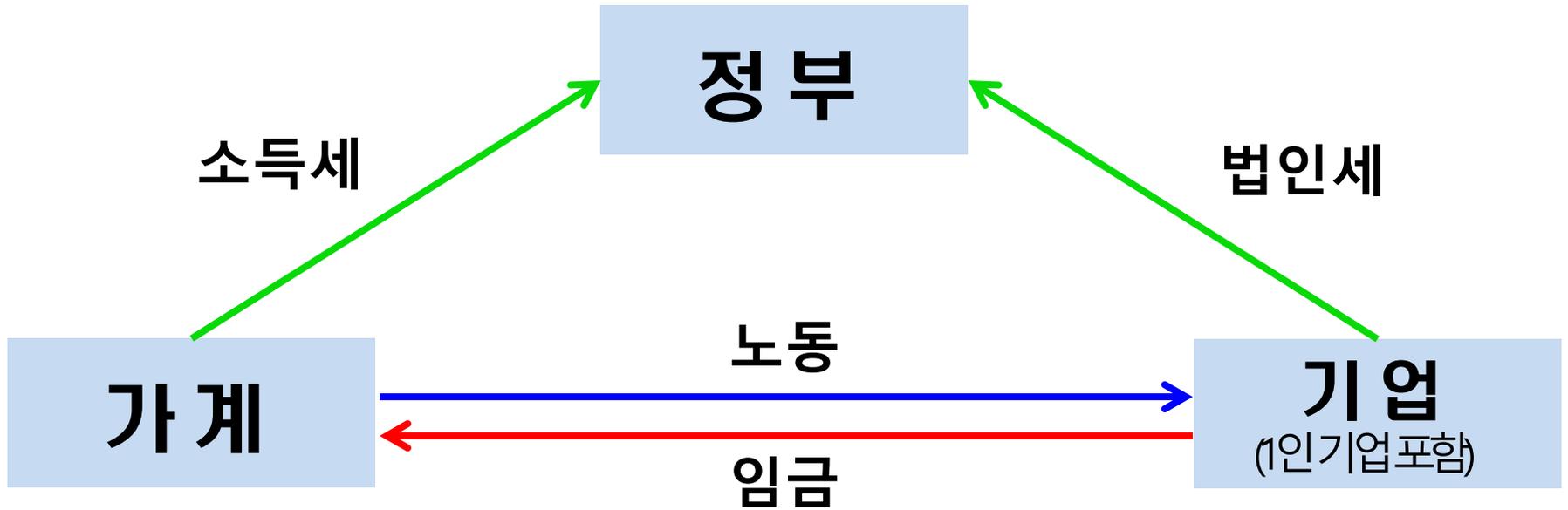


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과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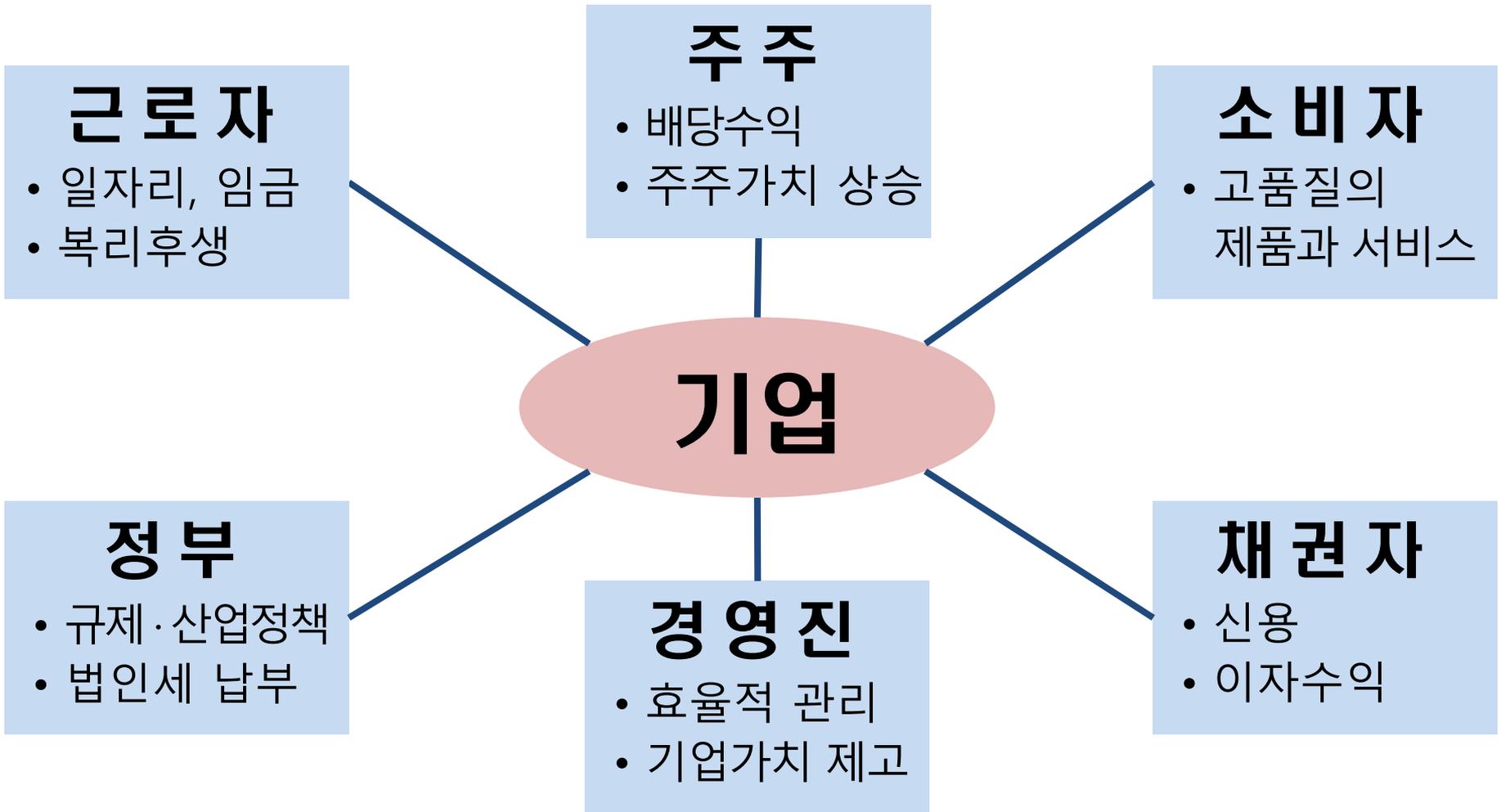
前 국회의원 최운열

경제3주체와 순환모형



若無企業 是無勞動
기업이 있어야 노동이 있다.

기업과 이해관계자 모형



기업과 기업인의 구분



뉴스 | 오피니언 | 프리미엄 | 연예 | 스포츠 | 증권 | 부동산 | 교육 | 비즈&

뉴스홈 전체기사 경제 기업 사회 국제 부동산 증권 정치 IT과학 문화 기획연재 Special Edition 인기뉴스 암호화폐 오늘의

재계 '조현아 사태' 반기업정서 확산에 노심초사

매경닷컴 속보부 기자 | 입력 : 2019-10-24 07:32

재계가 '조현아 사태'로 인해

21일 재계에 따르면 총수 이회창 사장의 '땅콩 회항' 사건 이후

조 전 부사장 개인에게 집권당 회사를 소유물로, 직원을 대대적으로 해고하고 있다.



한겨레



경제 금융 증권

국회,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 시동... '원포인트 특혜' 논란

등록 : 2019-10-24 07:32



경제 많이 보는 기사

1. [팩트체크] 집주인이 '을' 되는 '전세 무한연장법'이 다?



2. 현대중-대우조선 합병 6개 국 심사 '9월 결판' 전망



3. 사업 재경비 쏘카... '타다' 카니발 100대 앱에서 최대



범죄전력 심사 요건 추가 완화법안
국정감사서 여야 일부 의원 힘써
오늘 법안소위 논의... 금융위 입 주목

시민단체 "범죄기업에 맡겨선 안돼"

한국경제, 기울어진 운동장



한국경제의 현황 양적 지표는 선진국?

대한민국 경제 (2018년 기준)

| 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
| 국내총생산 (GDP) | 10위 / 185개국 | 1조 7,209억불 | 외환보유액 (금포함) | 8위 / 156개국 | 4,037억불 |
| 수출규모 | 4위 / 64개국 | 6,049억불 | 수입규모 | 6위 / 64개국 | 5,352억불 |

* 자료: 통계청, 국가통계포털 KOSIS 국제통계

30-50클럽 (1인당 GNI 3만 달러 / 인구 5,000만명 이상 / 현재 세계 7개국 해당)

| 국명 | 2018년 1인당 GNI (\$) | 인구 (명)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대한민국 | 3만3,434 | 5,161만 |
| 미국 | 6만3,402 | 3억2,710만 |
| 독일 | 4만9,383 | 8,312만 |
| 영국 | 4만1,549 | 6,714만 |
| 프랑스 | 4만3,690 | 6,499만 |
| 일본 | 4만0,563 | 1억2,720만 |
| 이탈리아 | 3만4,544 | 6,063만 |

* 자료: 통계청, 국가통계포털 KOSIS 국제통계

한국경제의 현황 질적 지표는 후진국!

▪ World Economic Forum의 2019년 국가경쟁력 평가 (기획재정부 보도자료)

| 대분류 | 소분류 | 순위 | 비고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|
| 시장경쟁수준 | 시장의 경쟁 수준(독과점수준) | 93/141 | |
| | 서비스 업계의 경쟁 | 48/141 | |
| 노동시장구조 | 고용 및 해고 관행 | 102/141 | |
| | 노사협력 | 130/141 | |
| | 근로자의 권리 | 93/141 | |
| | 임금결정의 유연성 | 84/141 | |
| 기업지배구조 | 감사 및 보고 기준의 수준(회계) | 37/141 | |
| | 금융시장 성숙도 | 74/138 | 2017년 |
| | 이사회 유효성 | 109/138 | 2017년 |
| | 소액투자자 보호 | 99/138 | 2017년 |
| | 창업비용 | 97/141 | |
| 정부정책 | 정부 규제의 기업 부담 정도 | 87/141 | |
| | 규제 개혁 효율성 | 67/141 | |
| | 정부정책 안정성 | 76/141 | |

▶ **공정거래법 개정 필요**

▶ **노동개혁 필요**

▶ **외감법 개정 완료**

▶ **상법 개정 필요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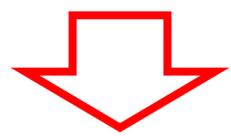
▶ **정치개혁 필요**

한국형 사회적 대타협

기업지배구조 개선,
경영투명성 강화,
공정경쟁 확립을 위한
제도 개선 및 선진화
→ 상법, 공정거래법 등



서비스 경쟁력 강화,
창업 활성화를 위한
구태 규제 혁파
→ 서비스산업발전법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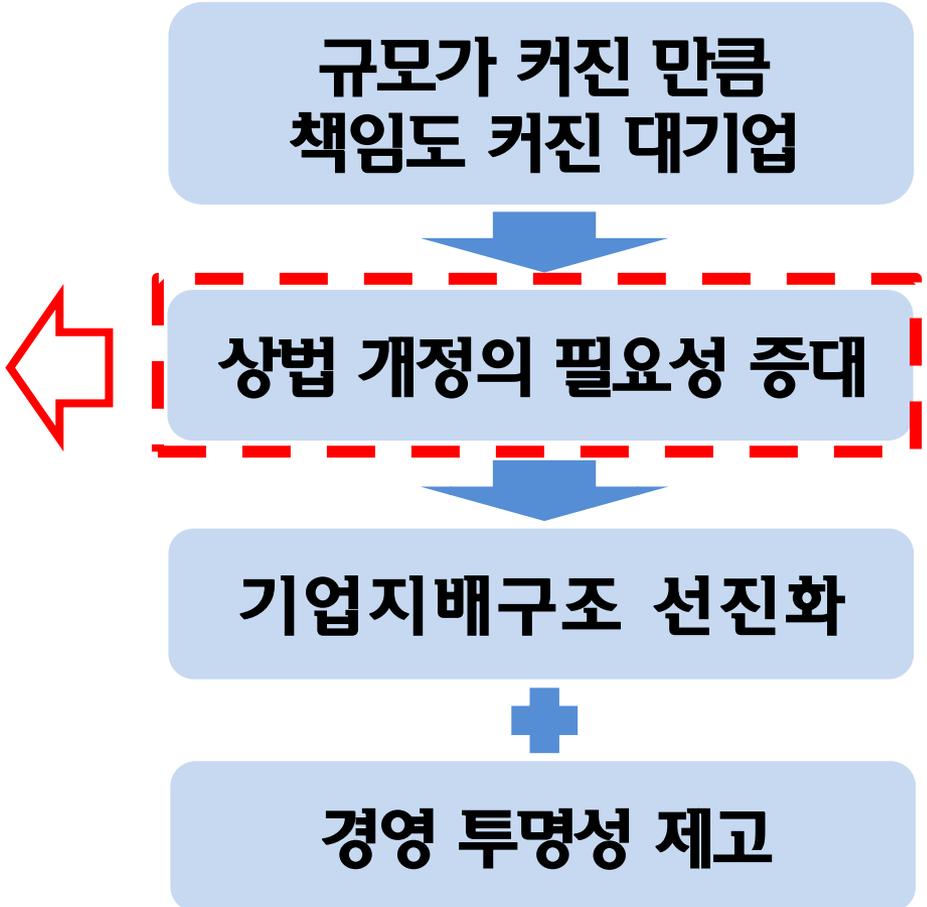


개인과 기업의
기업가 의식 고양

규제 빅딜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

상법 개정

- 제20대 국회 상법 개정안 5대 쟁점
 1. 다중대표소송제
 2. 전자투표제
 3. 감사위원 분리 선출
 4. 집중투표제
 5.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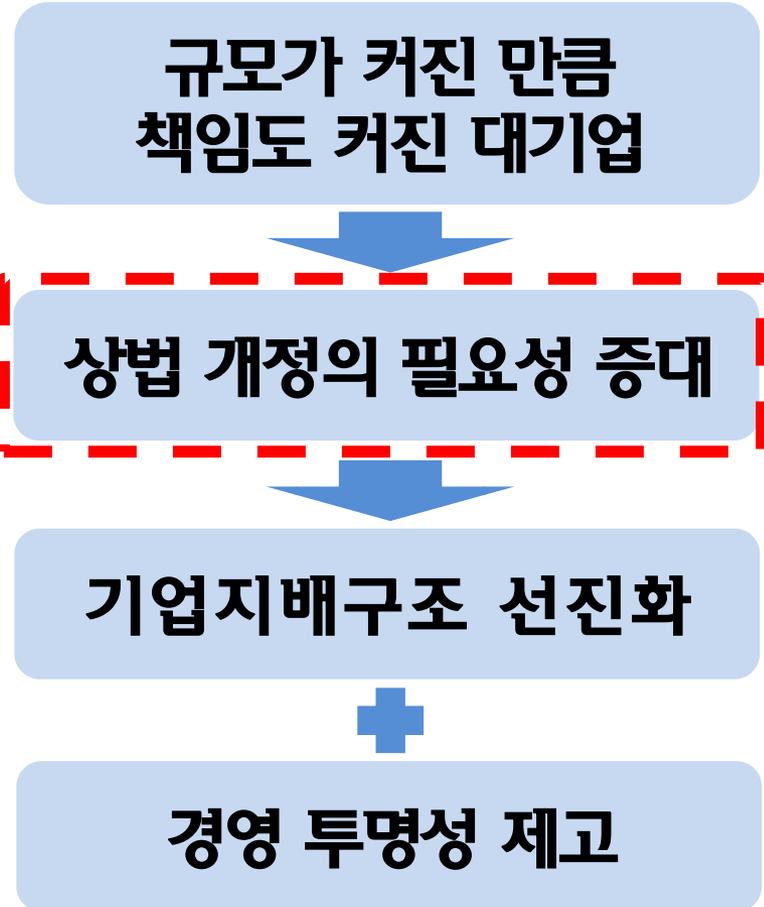


정경유착의 근절, 기업을 정치로부터 독립시켜야

상법 개정

- 제20대 국회 상법 개정안 5대 쟁점
 - 다중대표소송제
 - 전자투표제
 - 감사위원 분리 선출
 - 집중투표제
 - 사외이사 후보 추천권 확대

2020년 법무부 입법예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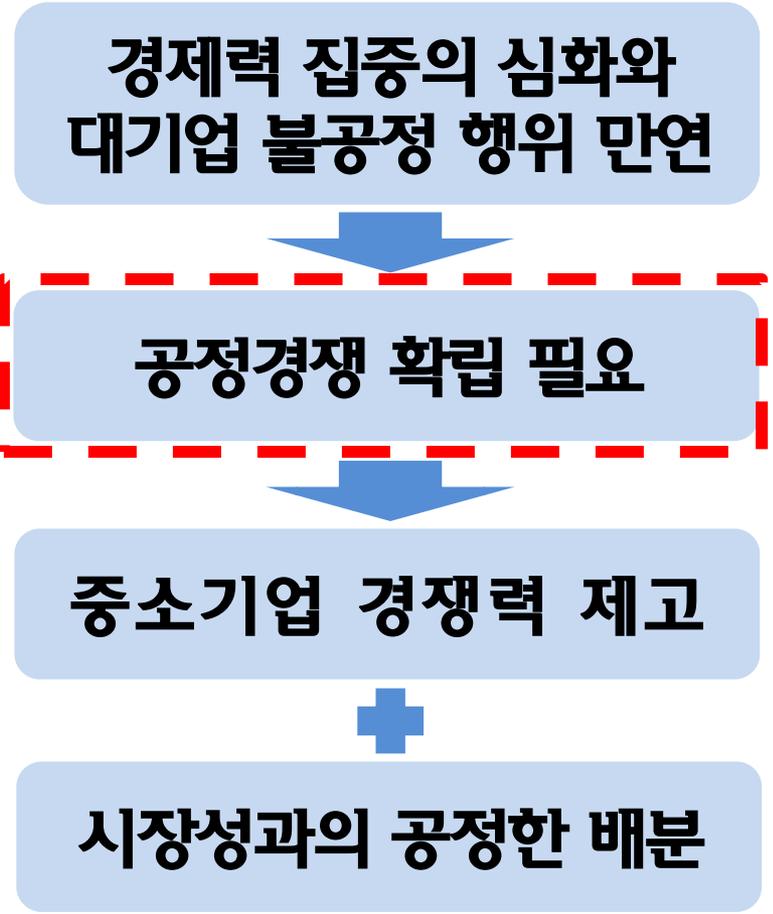


정경유착의 근절, 기업을 정치로부터 독립시켜야

공정거래법 개정

- **공정거래법의 전속고발권**
 고발권을 남용해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
 공정거래위원회에게 고발권을 독점하도록 규정한 제도
 → **공정위판 전관예우 수단 전략**
전속고발권 폐지

- 형사벌을 과징금 등으로 전환
- 별건 수사관행을 개선



기회는 평등하게, 과정은 공정하게

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

추격·의존형 경제



선도형 경제

● 규제 패러다임 전환으로 4차 산업혁명 선도

1. 열거주의 or 건별 규제 → 포괄주의 규제 + 징벌적 손해배상
→ 기업에 자유를 주되 법과 원칙을 어기면 파산에 이를 정도의 강력한 패널티 부과
→ (예시) 개인정보보호법 개선 → Big Data 활용
2. 생명, 안전, 환경에 관한 규제는 강화

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(1)

1. 은산분리 완화 및 CVC(기업형 벤처캐피탈) 허용

- 과거 고도성장기에는 자금의 초과수요 상태가 지속되었기에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면 사금고화 우려
- **BUT** 현재는 자금의 초과공급이 문제되므로 은산분리의 필요성이 완화되었고 통합감독시스템을 도입하면 충분히 보완 가능

2. 규제혁신 기반 Re-Shoring 활성화

- **Global Supply Chain**(국제적 공급망)의 근본적 재검토 필요
- 수도권 규제 완화를 통해 수도권 유턴 기업에 일정기간 공장부지 무상임대, 법인세 한시적 면제, 새로운 형태의 임금체계 도입 허용

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(2)

3.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

- IT기반 비대면 진료 일반화, 의료관광 활성화 등을 통해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성장 동력 육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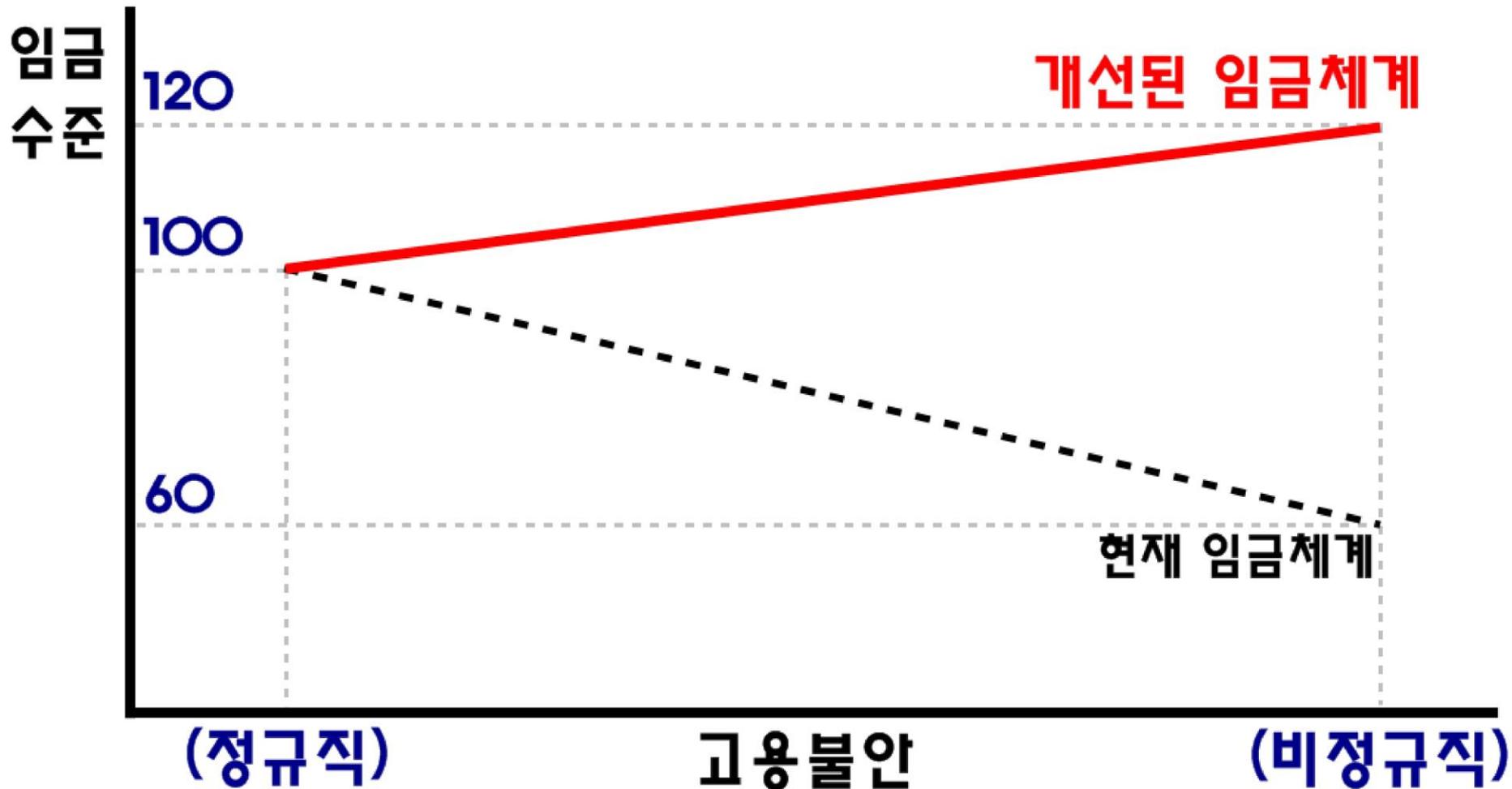
4. 혁신창업기업의 활력 제고

-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활성화
-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 (벤처창업 한정)
- 스톡옵션 제도 개선
- 기업 인큐베이션 금융 컨설팅 활성화 (중소기업금융 전문 증권사 등)

노동개혁

- **親노조와 親노동을 명확히 구분하고,
1953년 제정된 노동관계법 전면 개정해야**
- **최저임금 구조 개편**
최저임금의 지역별, 업종별 차등화 도입
최저생계보장은 근로장려세제(EITC) 활용이 바람직
- **비정규직 문제 해결**
임금 구조조정을 통한 고통분담
동일노동 공정임금 체계 확립 (→ 후술)
- **"인력" 구조조정이 아닌 "임금" 구조조정 단행**
- **노동이사제 검토**

동일노동 공정임금체계



임금 구조조정 캠페인

$$P \times Q \leq S(r)$$

P: 임금수준 Q: 임직원수 S: 매출액

r: 기업이 생존가능한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

**"매출이 감소할 때
고용을 유지하고
임금을 절약하여 생존"**

“대통령을 포함하여 1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모든 공기업 임원의 급여를 20% 이상 삭감할 것을 제안합니다. (중략) 선배·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노블리스 오블리제 차원에게 세비 삭감에 동참해 줄 것을 제안 드립니다. (중략) 기업의 대주주와 이사 이상 임원들도 급여 20% 삭감 운동에 동참해 주십시오. (중략)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간곡히 호소합니다. 비정규직 동료 근로자와 후배 청년 실업자들을 위하여 임금 삭감 운동에 동참해 주십시오.” (2016. 9. 22. 최운열 대정부질문)

주 52시간 근무제 보완

1. 도입배경 및 전제조건

- **(배경)** Job Sharing을 통한 일자리 창출, 워라밸(Work and Life Balance) 실현, 일주일을 5일이라고 해석한 행정부의 임의적 유권해석 방지 및 법치주의 구현
- **(전제조건)** 제도 도입 당시 경제상황이 개선되거나 유지될 것

2. 사정의 변경과 보완책

- 코로나19 위기, 미·중 무역마찰,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대외환경이 악화되었고. 전통제조업의 경쟁력 약화로 기본가정 자체가 무너짐
- **(보완책)** 근로시간 설정을 기업 자율에 맡기고, 실행한 기업에 혜택

세정개혁

세정개혁 대차대조표

4. 세입(稅入)구조 개혁

- 법인세
- 소득세
- 상속 및 증여세
- 증권거래세
- 부동산세

5. 세출(稅出)구조 개혁

- 보편적 기본소득 준비
→ 노동구조 변화 대비와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기존 복지정책을 전면 개편하여 기본소득으로 통합
- ① 보편성 : 사회 구성원 누구에게나 지급
- ② 무조건성 : 자산/소득조사 및 의무부과 없는 지급
- ③ 개별성 : 가구가 아닌 개인에게 지급
- ④ 현금성 : 현물, 조세이전이 아닌 현금 지급

보편적 기본소득 준비

반대

- 제한된 예산으로 제도 유지가 어렵고 재정부담 가중
- 생계 여유로 근로의욕 저해
- 유동성 증가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
- 사치성 · 낭비성 소비 증가

찬성

- 생계 안정에 기반한 창조성 발휘와 창업 촉진
- 스트레스 · 범죄 감소, 관계강화 등 공동체의 결속력 강화
- 소비와 수요경제 자극 및 촉진
- 사회안전망 강화로 산업 구조조정의 여력 확충(실업우려 ↓)
- **"사회를 보다 공정하고 공평하고 정의롭게"**

감사합니다